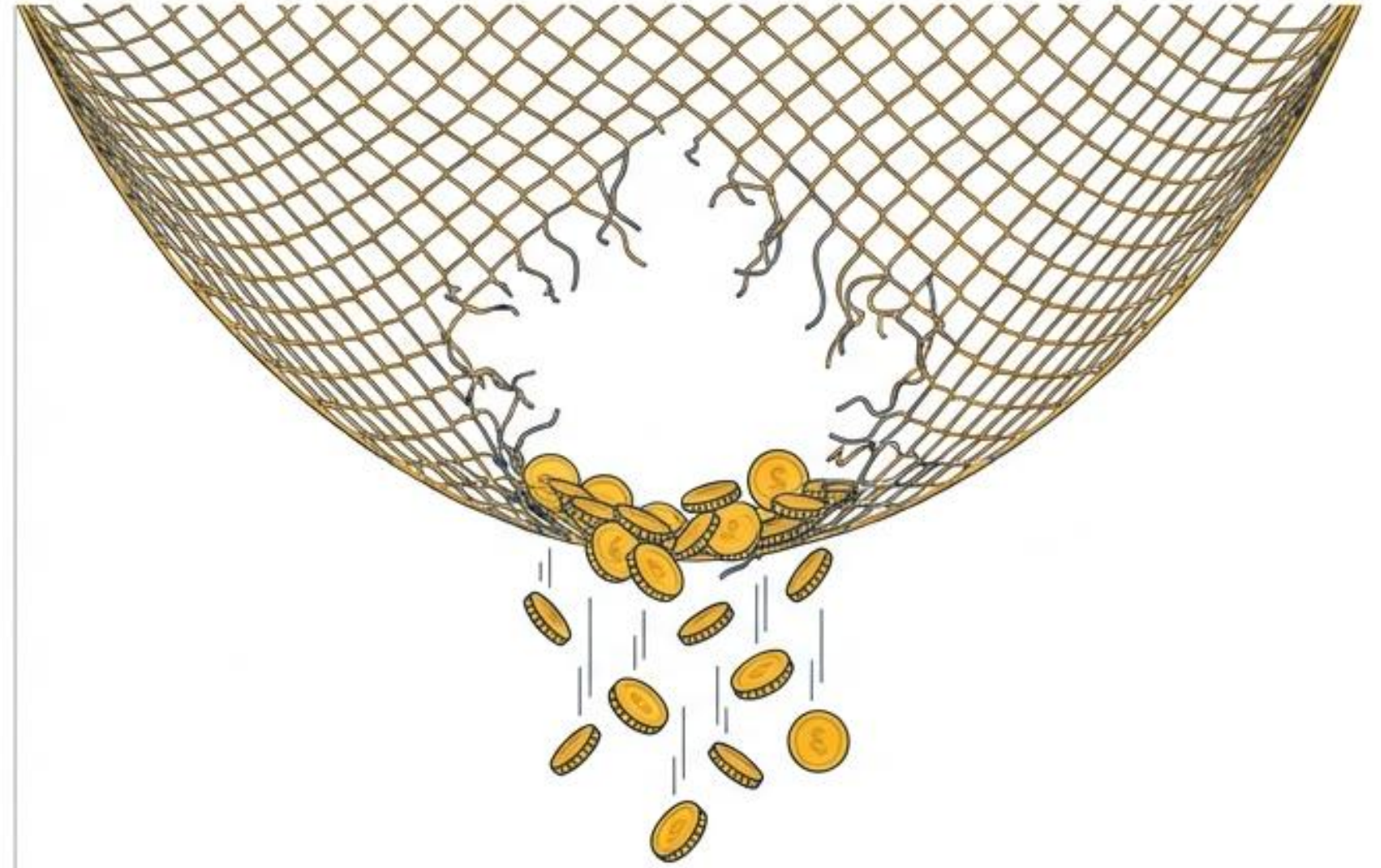


퇴직연금의 역설: 국민연금급 비용을 지불하고도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법정 퇴직연금(DC)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9%)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본 투입



붕괴된 노후 안전망

1년 이상 근속자의 법정 의무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 상실. 단순한 '금융시장 활성화 수단'으로 전락.

핵심 진단: 지난 20년간 노후소득보장 수단에서 배제된 채, 연 2조 원 이상의 수수료만 금융기관에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 고착화.

국민연금 수익률과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퇴직연금 개혁을 둘러싼 4가지 동상이몽 (관점 진단) 및 현실적 한계

민간 운영 유지 + 공적 역할 강화 (제4의 길)

서구 연금 개혁의 핵심.
당위성과 현실성을 모두 잡는
전략적 타협점.

Claim

민간 자율성 및 효율성 존중,
공공의 감독 역할 강화.



통합된 개혁 모델 (제4의 길)

완전 공적 전환

국민연금 흡수 및
재정 개선 활용

Claim

기여금 이전을 통한
공적연금 재정 개선



치명적 반론: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
이를 '퇴직금 삭감'으로 인식하며,
불이익 변경 없는 DB 전환 등
실무적 장애물이 매우 높음.

준공적 연금 운영

스웨덴식 개인계정,
공단 참여

Claim

공단이 참여하는
개인계정 방식 도입



치명적 반론:
현재의 민간 시장을 전면
박탈할 만큼 현 방식에
'결정적 불법성'이 있다고
증명하기 어려움.

현행 유지 및 자율성 강화

퇴직금 성격 인정,
완전한 금융상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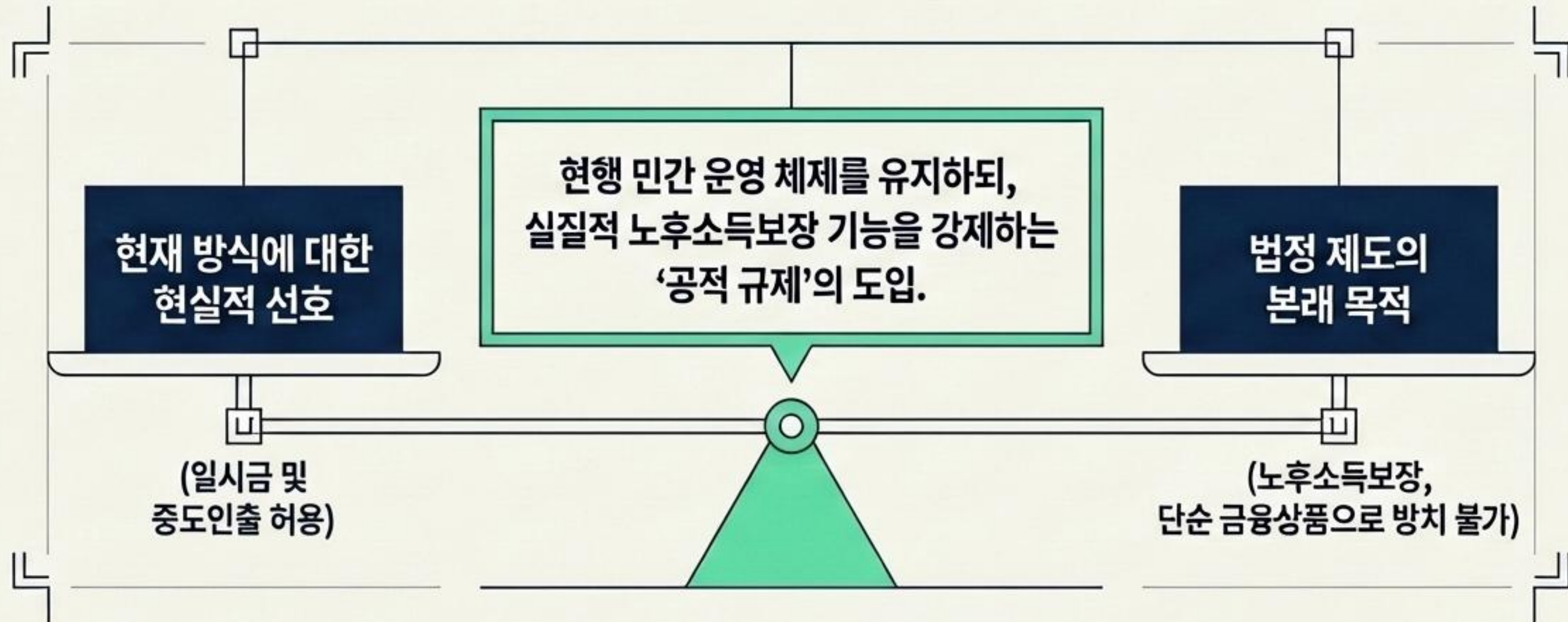
Claim

퇴직금은 단순 임금이므로
자율적 증도인출 및 금융상품화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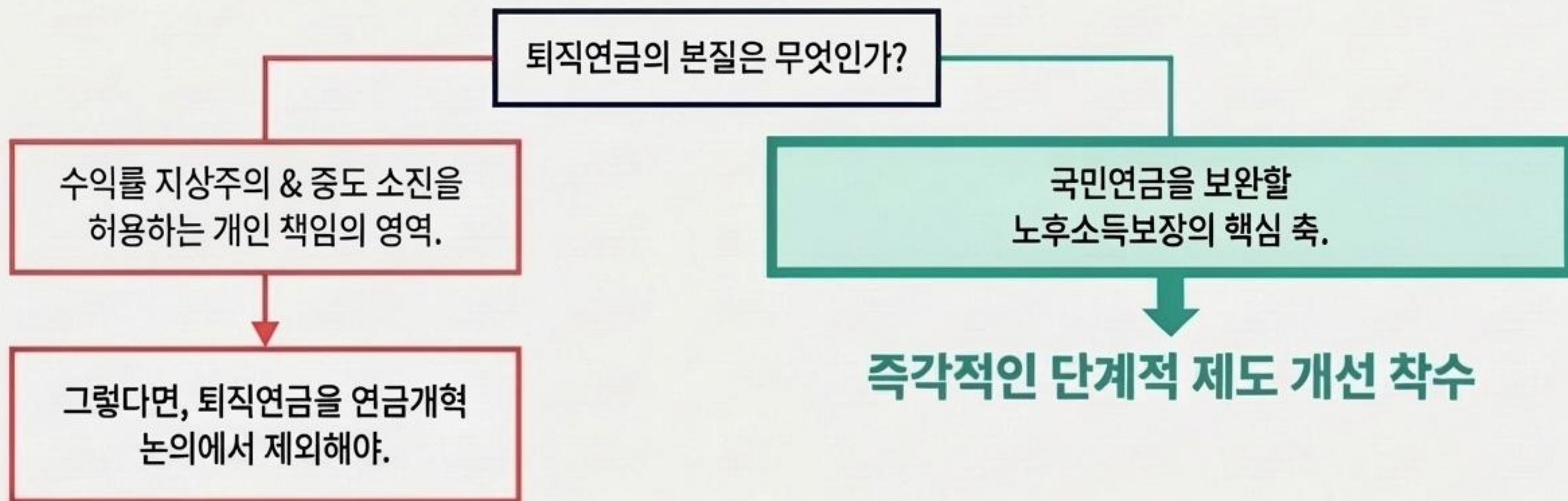
치명적 반론: 단순 금융상품이라면
국민연금에 맞먹는 8.3%를 의무로
묶어둘 이유가 없음. 이 논리라면
연금개혁에서 아예 배제하고
임금으로 흡수시켜야 함.

딜레마의 돌파구: '근로자의 선호'와 '제도의 본질'을 연결하는 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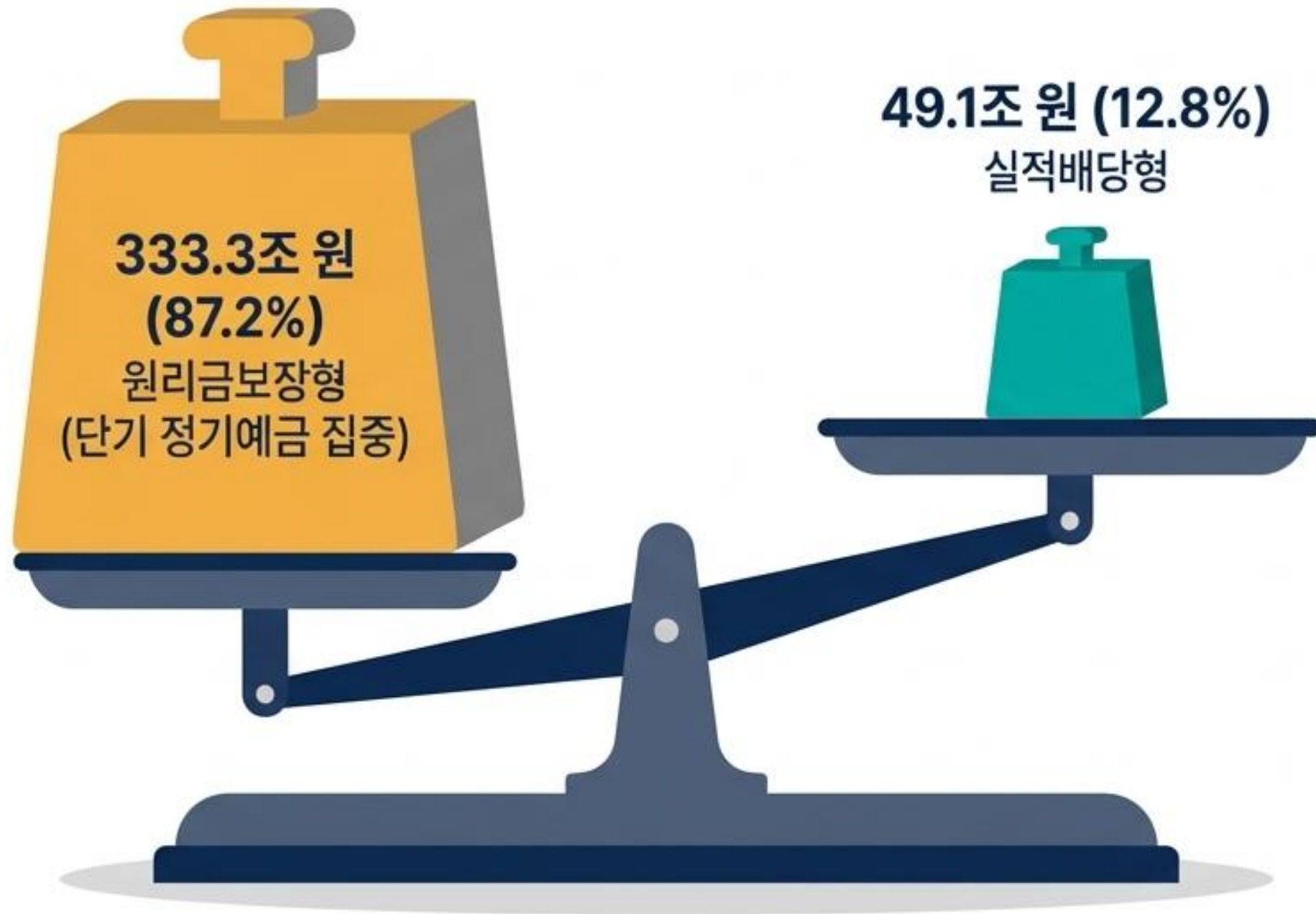
서양의 연금 개혁 역시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대신, 기업연금(사적연금)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그 빈자리를 상쇄

퇴직연금을 진정한 개혁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결단



이하의 내용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노후소득보장의 핵심 축이라는 입장에 기초해서 퇴직연금의 방향을 제시하겠음

구조적 결함 1 (지배구조): '개인의 선택'이 초래한 382조 원의 자산 동면(冬眠)



- 현재의 계약형(Contract-type) 구조는 가입자 개인(DC)이나 인사담당자(DB)에게 전문적인 투자 결정을 전가.
- 전문성 부재와 무관심으로 인해 87.2%의 막대한 자산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에 방치됨.
- 합리적 개인의 선택을 전제한 제도가 오히려 집합적 투자를 수행하는 국민연금 대비 절대적 비효율을 낳고 있음.

구조적 결함 2 (수급 방식): 밀빠진 독, 연금자산의 치명적 누수 현상

- IRP 이전 계좌의 압도적 다수가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해지됨.
- 3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은 IRP를 거치지 않고 즉시 일시금으로 인출.
- 수급연령 도달 이전에 자산이 모두 소진되어 '연금화(Annuitization)'를 논할 기초 자산 자체가 붕괴됨.



연금화의 착시: 축적되지 않은 자산은 연금으로 전환될 수 없다

연금수령 비중 (금액 기준)



연금수령 비중 (금액 기준)



연금수령 평균 적립액: 1억 4,700만 원

연금수령 비중 (계좌수 기준)



연금수령 비중 (계좌수 기준)



일시금수령 평균 적립액: 1,700만 원

금액 기준 57%가 연금으로 지급되는 듯 보이나, 실제 계좌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함.
자산 축적이 일정 수준(약 1.5 억 원)을 넘지 못하면 연금수령은 무의미하며, 결국 대부분 일시금(Lump-sum)을 선택함.

1단계 청사진 (단기 과제): 파이프라인 누수 차단 및 기초 적립 강제

DB 적립부족

50% 이상의 DB 사업장이 최소적립률 미달.

| 구분 | DB드입 사업양 수 | 최소적립률 미달 사업양 |
|-------|------------|--------------|
| 2018년 | 102,967 | 58,208(56.5) |
| 2019년 | 102,985 | 56,925(55.3) |
| 2020년 | 98,705 | 60,137(60.9) |

강제적 과태료 부과 및
엄격한 적립률 규제

DC 기여회피

체불 시 처벌 규정 미비

자동 지연이자 부과 시스템 도입
(사회보험료 징수 방식 준용)

가입 사각지대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배제

단기 근속자 의무 가입 확대로
노동시장 왜곡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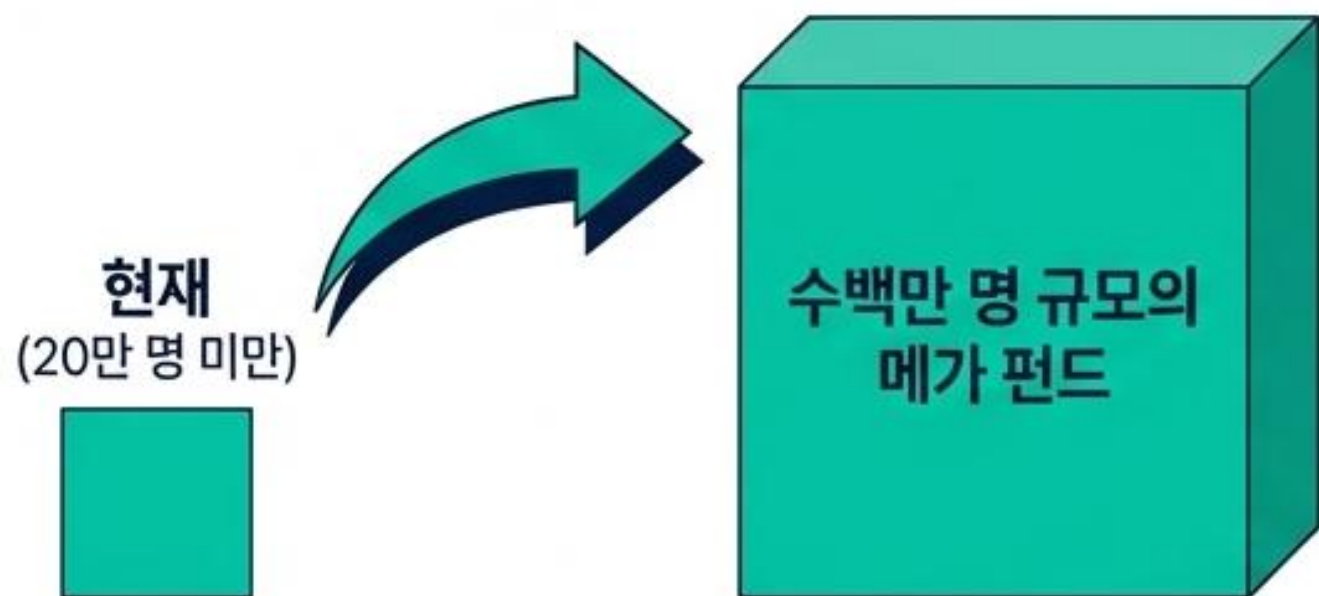
2단계 청사진 (지배구조 개편): '계약형'에서 전문가 집단 주도의 '기금형'으로

| Comparison Matrix | | | | |
|-------------------|---------------------------|------------------------|-----------------------|----------------------|
| | 현행 계약형 (Status Quo) | 연합형 기금 (Union Fund) |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 의사결정 주체 | 가입자 개인 / 기업 인사담당자 | 노사가 추천한 기금 이사회 | 금융기관 수탁법인 전문가 | 공공 개방형 기금 이사회 |
| 투자 전문성 | 매우 낮음 (무관심 방치)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 주요 포트폴리오 | 1년 만기 정기예금 집중 | 글로벌 분산 / 대체투자 집합운용 | 글로벌 분산 / 대체투자 집합운용 | 안정적 타겟데이트펀드(TDF) 등 |
| 목표 수익률 | 물가상승률 하회 (실질 자산 가치 하락) |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 |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률 제고 |

가입자의 수동적 선택에 의존하는 구조를 폐기하고,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집합 운용을 수행하는 기금형(Fund-type) 지배구조 도입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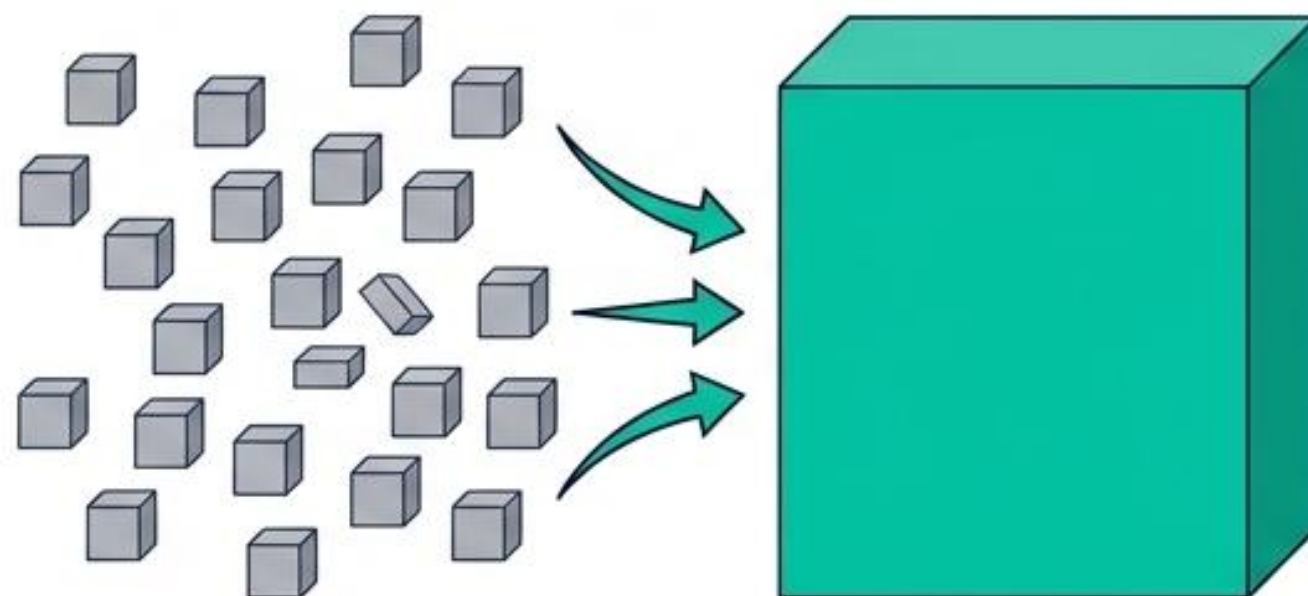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기금: 수백만 규모의 메가 펀드 창출 잠재력

중소기업기금의 확장성 (Scaling Up)



- 300인 미만 사업장 의무가입 시 공공 플랫폼 기금으로 폭발적 성장.
- 영세 사업장 근로자도 고품질 집합투자자 연금화 혜택 수혜.
- 글로벌 벤치마크: 영국의 NEST, 스위스의 SOB(Substitute Occupational Benefit).

연합형 기금의 도전 (Consolidation)



- 네덜란드/스웨덴 등 산별 기금이 성숙한 국가에서 증명된 우수성.
- 파편화된 한국의 노동조합 구조 극복이 핵심 과제.
- 영세 기금 난립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엄격한 통합/통폐합 규제 필수.

퇴직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퇴기금의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수적.

3단계 청사진 (자산 잠금 및 연금화): 일시금의 유혹을 차단하는 제도적 락인(Lock-in)



인출 사유를 엄격히 축소. 현금 인출 대신 연금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 대출' 방식으로 전환 유도하여 원금 훼손 방어.

이직 시 IRP로 이전된 자산의 무분별한 즉시 해지 금지. 해지 요건을 중도인출 요건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자산 이탈 차단.

기금형 도입으로 매력적인 종신연금 옵션 창출. 이후 일정 비율 또는 액수 이상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점진적 의무화.

전통적인 퇴직금(일시금) 선호 정서를 고려해 전면 강제화 대신, 기금형 지배구조 하에서 동질적 위험 분산을 통한 종신연금(Annuity) 옵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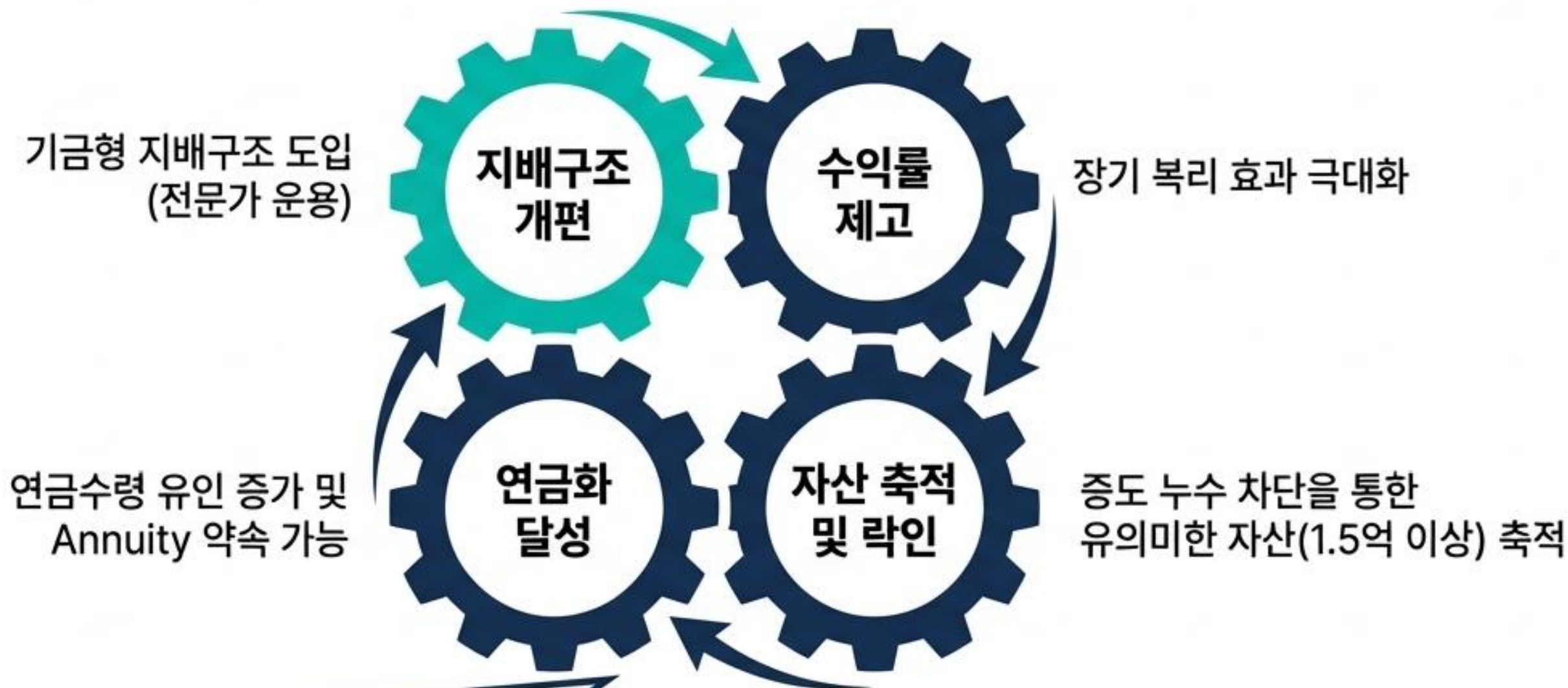
타겟 포지셔닝: '복지시장(Welfare Market)' 스펙트럼 조정



기업연금은 순수 금융상품도, 완전한 국민연금도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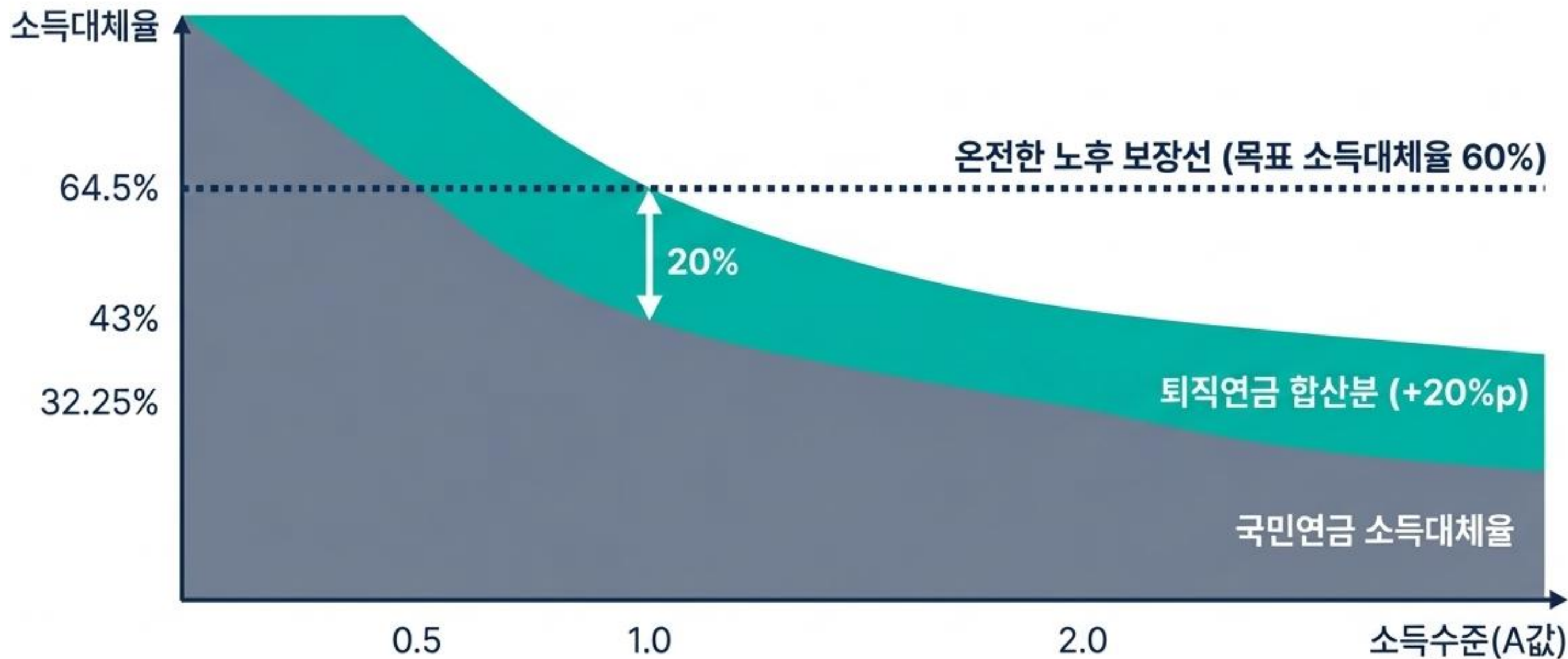
현재 극단적으로 시장에 치우친 시스템의 슬라이더를 중앙의 '복지시장'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개혁의 본질임.

통합 메커니즘: 파편화된 개혁 과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인과율



논리의 흐름: 왜 연금으로 안 받는가? → 자산이 적어서.
왜 자산이 적은가? → 증도에 다 빼쓰고, 수익률이 낮아서.
왜 수익률이 낮은가? → 전문성 없는 개인이 원리금보장형만 고르는 지배구조라서.
결론: 지배구조 개편(기금형)이 모든 연금화 개혁의 필수적 출발점이며 핵심 트리거임.

최종 청사진: 국민·퇴직연금 합산 '소득대체율 60%' 달성



누수 방지와 기금형 운용을 통해 퇴직연금이 실질적 연금으로 기능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을 보완하고 온전한 노후 보장선(60%)을 회복할 수 있음. 국민연금 보장성 인하의 핑계가 아닌, 상호 보완재로서의 역할 정립.